

# 입법정책정보

2023. 8.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 목 차 ||

I. 상위법령 제정 · 개정 .....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
2. 관광진흥법 .....	3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5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8
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10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 개정 .....	12
1. 부산광역시 스톡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	12
2.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15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17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	23

## I 상위법령 제정 · 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20.]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 · 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치료제 · 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 · 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 ·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 ·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 · 권한 · 의무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 ·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9.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7조의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

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방접종 실시주간)** ① 시장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6호, 2023. 8. 8.,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변경하고, 여행업 등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한편,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시행 2022. 9.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3(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 운영 경비
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 사업
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
4.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5. 관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지원 사업

③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하고,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협의 대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2.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경우: 특별관리시설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관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교통시설의 관리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시행 2022. 12.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94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취수장·정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 변전소 중 기계 등의 설비가 장치되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무관한 시설물
2.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단지 내의 시설물 중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급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다.
-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경감대상 시설물)**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 경감률)**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범위 및 경감률 등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매년 7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감축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감축활동 이행기간)** ① 감축활동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7월 31일까지 기간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개월 수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축활동 이행기간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은 버린다. 다만, 이행기준에 실제 사용금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감축활동 인정범위)** 시장은 시설물 소유자가 별표 1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감신청 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제11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징수금의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690호, 2023. 8. 8.,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② (생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 ⑤ (생략)

⑥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 ③ (생 략)

## □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 2020. 10. 14.] [대전광역시조례 제5513호, 2020. 10. 14., 일부개정]

**제20조의2(시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시장은 시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재”는 “시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 2. 시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생략)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 ⑤ (생략)

### □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대전광역시조례 제5781호, 2021. 12. 2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전광역시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8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 개정

### 부산광역시 스토킹 ·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 · 지원 조례

[시행 2023. 8. 16.] [부산광역시조례 제7003호, 2023. 8. 16.,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스토킹뿐 아니라 데이트폭력도 함께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 ·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 · 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 · 데이트폭력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 ·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 ·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 ·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 ·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주거·자립 등 지원사업
  - 4.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5.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시행 2023. 8. 7.]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29호, 2023. 8. 7., 제정]

### □ 제정이유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임명·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의 법제화 및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문화운동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8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의견23-0236 / 요청기관: 전라남도 담양군]

##### □ 의뢰안전

-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가.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입찰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소송목적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담양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입찰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소송목적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담양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법제처 2020. 11. 10. 의견제시 20-0242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0. 11. 10. 의견제시 20-0242 참조).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제6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제8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제10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 등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공유재산을 이용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이용”이 그 행위의 성질 등에 있어 취득이나 처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에서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이용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의 이용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관하여 조례로써 별도로 정할 것을 용인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취지 참조).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지방의회가 일정 부분 관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이하 “담양군의회조례안”이라 한다)에서 “보고”란 의회에 설명하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고(제2조제2호) 규정하고 있고, 담양군수는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하도록(제7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는 등 계약의 방법을 규정(제9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것(제1조)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1. 12. 의견제시 22-0011 참조).

살피건대, 담양군의회조례안 제4조제1호에서는 입찰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담양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담양군의회에 보고한 후 반드시 담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담양군의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공사의 시행에 대한 보고가 담양군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계약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한 입찰계약금액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1. 12. 의견제시 22-0011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입찰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라. 질의 다에 대하여**

담양군의회조례안 제4조제2호에서는 소송목적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담양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담양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제47조제1항제2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제50조), 예산의 의결(제142조), 결산(제1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에 관한 승인을 하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각주: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담양군수가 담양군의회조례안 제4조제2호에 따른 소송 수행을 담양군의회에 보고한 후 반드시 담양군의회 의결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양군의회가 담양군수의 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하는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담양군의회조례안에서 사전에 담양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취지 참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담양군의회조례안 제4조제2호와 같이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담양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의견23-0288 /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 의뢰안전

○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참조).

이 사안은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6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서는 지방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지방의회와의 협의가 “동이나 합의”를 의미하는지,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불문하고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정관 변경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11. 8. 의견제시 22-0293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공단에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2. 23. 의견제시 21-0061;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 21-0179 참조).

나아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1조 및 제76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공단의 운영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083 참조).

따라서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 □ 주요내용

인공지능(AI)은 의료, 교통, 금융, 노동, 제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하여 성장하며 이용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큰 편리를 가져다주는 반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오작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저작권 침해 등의 부작용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 ○ 대만

대만은 행정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디지털부, 문화부 등과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광고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AI 관련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인공지능 기본법」 법률안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안에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 원칙 등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러시아

AI 분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나 법률은 없으나 현재 “2024년 AI 기술 및 로봇공학 분야의 규제 개발에 관한 구상”을 공식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구상은 신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세계에서 러시아의 선도적인 위치 보장,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성을 가지며 AI 시스템의 이용 시 법적 책임, 정보의 보호, 개발자를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21-2025 AI 로드맵(AI-RAMP)”을 발표하여 인재 개발, 연구 개발, 산업 채택 및 거버넌스라는 네 영역에 초점을 맞춰 말레이시아를 AI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의 책임에 공정성, 안전성, 윤리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7일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AI 사용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 ○ 미국

미국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13859호로 발표한 “미국 인공지능 구상” 이후, 「생성적 적대 신경망 출력물 확인법」과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을 제정하여 AI 연구개발과 훈련 지원을 중심으로 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담조직으로 백악관 과학기술처에 국가인공지능

구상실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 연방정부의 AI 사용에 대하여는 행정명령 제13960호, 「정부인공지능법 2020」, 「조달인력의 인공지능 역량강화법」, 「미국인공지능진흥법」 등의 법령을 두고 있다.

#### ○ 베트남

베트남은 현재 AI 규제 관련 법률은 아직 없으나 2021년 정부 총리의 결정 제127/QĐ-TTg호에 의한 AI 연구·개발 및 응용 국가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를 베트남의 중요한 기술분야로 발전시켜 아세안 혁신허브 4위권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방면의 AI 기술 보급 확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각 부처에게 지식재산권, 사생활 및 인권 보호 등 관련 법률 제정, 제도 구축과 같은 도전과제가 주어졌다.

####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AI 규제를 위한 법률은 없으나 2030년까지 세계AI국가순위 15위 진입을 목표로 2020년에 “데이터·AI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Data & AI)”을 발표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정부투자 확대를 통한 AI 전문인력·스타트업 양성 추진과 이 분야의 기술, 정책 및 규제, 연구혁신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계획을 실행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AI 개발추세에 따라 이 분야의 보안, 윤리, 책임, 규제에 대한 국가 및 기관 차원의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현재 AI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산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2019년 1월 발표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AI Governance Framework)”를 통해 인간 중심적이고 설명 가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간 부문의 AI 관리체계, 윤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 알제리

알제리는 교육, 연구 등의 전 분야에 걸쳐 AI 역량을 확대하고 여러 분야에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1월 18일 “2020-2030 AI에 관한 연구 및 혁신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으며, AI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국립인공지능학교 창설에 관한 대통령령」을 2021년 8월 22일 제정하였다. 아직 관련 법안이나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 ○ 영국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2023년 3월 AI 백서 “AI 규제에 대한 친혁신적 접근(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을 발표하였다. 백서는 혁신을 억제할 수 있는 강압적인 법안의 도입을 피하고, AI 규제에 적용 가능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며, 새로운 단일 규제 기관을 만들어 전권을 부여하는 대신 기존 관련 기관이 상황별로 맞춤형 접근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AI의 위험에 국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3년 말 첫 글로벌 AI 안전 정상회의(global AI safety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AI 감시기구를 런던에 유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현재 AI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 법률은 없으나 AI 기술 개발 장려를 위하여 “국가AI전략 2020-2045”를 마련하였다. 이는 다양한 부문에서 AI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 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 및 활용을 관리하는 규정 마련을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정보통신법」 개정안에 있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적 설비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 일본

일본은 생성형 AI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 법률은 없으며, 현시점에서 법률 제정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9년 내각부에서 “인간중심의 AI사회원칙”을 책정한 이후 각 부처에서 실천적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또한, 생성형 AI의 진화 및 보급에 따라 내각부는 2023년 5월 AI 업계 지식인으로 구성된 “AI전략회의”를 발족하고, AI의 이용 및 리스크 개발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관계부처의 실무자로 구성된 “AI전략팀”이 “AI전략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AI와 관련된 여러 과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결성되어 논의를 진행 중이다.

### ○ 중국

중국은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중국표준 2035”에 “중국형 과학기술표준의 세계화”를 장기목표로 명시하였으며, 중점과학기술에 AI 기술을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한 여러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령은 2023년 7월 10일 공포되었고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AI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의 허용 범위,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 벌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제C-27호를 지난 2022년 6월 16일 의회 하원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AI 규제 전담 부서 신설 △AI와 관련한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다.

### ○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디지털 분야를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9년 디지털 관련 전략 계획을 위한 “국가디지털계획(PNN)”을 작성하였다. 인프라 현대화, 콘텐츠 접근 및 보안, 어플리케이션 사용, 거버넌스 및 규제에 네 가지 전략축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의 디지털 분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된 이 계획에는 AI 시스템 운영 기술에 필요한 정보기술, AI 윤리에 관한 특정 기술에 관한 전략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 태국

태국은 아직 AI 규제 관련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경제 성장 촉진, 국가 경쟁력 제고, 인재 개발, AI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2022년 7월 26일 “AI 적용을 위한 사회, 윤리, 법률 및 수칙 측면에서의 준비”를 포함하는 5가지 전략과 15가지 작업 계획으로 구성된

“태국 개발을 위한 국가 AI 실행 계획(2022-2027)”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다.

#### ○ 페루

페루는 2023년 7월 23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AI를 “신용기술로써,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기여하며, 혁신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로 정의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총리실과 페루 디지털정부혁신부를 AI 및 신용 기술의 개발과 홍보를 지휘·평가·감독하는 책임기관으로 규정하였다.

#### ○ 필리핀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디지털화 및 인프라,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규제라는 4가지 측면에 초점을 둔 “국가 AI 로드맵(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oadmap)”을 2021년 5월 발표하였다. 특히,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AI 및 데이터 중심의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및 성장을 위한 지원,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검토 및 변화, AI 및 데이터 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동향」, 공공누리 제1유형, 2023.8.16.